

종합

분향소마다 추모인파 ‘극락왕생’ 기원

■ 법정스님 전국 추모열기 고조

13일 ‘무소유’의 법정 스님의 다비식을 앞두고 순천 송광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추모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12일 오후 법정스님의 법구가 도착하면서 송광사 지장전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단체 추모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법정스님의 법구는 문수전에 안치됐으며 사찰 입구 다비장은 이미 터닥이 작업이 끝났고, 다비 봉행 도구 및 나무 등도 제자리를 지키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인파가 몰릴 조짐을 보이자 송광사측은 경찰에 증원을 요청하는 한편 사찰 입구 다비장이 비좁을 것에 대비, 3km정도 떨어진 오두암 인근에 제2의 다비장을 예비로 마련하는 대책도 세웠다.

다비식 준비 만전

11일 오후부터 광주지역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에는 저녁부터 추모객이 몰리기 시작해 다비식 전날인 12일 직장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삼삼오오 들러,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와 무등산 침심사에도 분향소가 설치돼 시민들이 찾고 있다.

서점가에도 법정스님 저서를 찾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영풍문고 광주점에는 법정스님의 입적한 11일 오후부터 스님의 대표작인 ‘무소유’와 ‘일기일화’, ‘오두막 편지’ 등을 찾는 이들의 문의전화와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데 대부분이 바다났다. 총장서에도 주문 전화나 직접 구매 고객

이 밀려들면서 25종 가운데 5~6종만 남겨둔 채 모두 매진됐다.

‘무소유’ 등 관련 서적 불티

누리꾼들도 관련 기사에 추모 댓글을 달며 스님을 추모했다. 스님이 창건한 길상사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글과 추모글이 쇄도하고 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맨 오른쪽)를 비롯한 천주교 사제들이 12일 법정스님의 법구가 안치된 순천 송광사 문수전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순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화명 ‘유명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정신이자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하신 큰 스승인데 이렇게 빨리 가시다니 너무 슬프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장익 주교 “스님 고맙습니다”

천주교계에서도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11일 천주교서울교구 정진석 추기경이 조전을 보낸 데 이어 법정스님과 30여년간 교유한 전 천주교 춘천교구장 장익 주교는 12일 ‘스님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범보신문사에 보내 애도를 표했다.

장 주교는 법정 스님이 길상사를 창건하기에 앞서 함께 유럽의 유서 깊은 수도원을 여행했으며, 김수환 추기경의 길상사 개원법회 참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이견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가 11일 지방으로 입적한 법정스님의 밀린 병원비 6천200만 원가량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실한 원불교 신자인 홍씨는 조계종 불교 여성개발원에 의해 지난 1월 ‘여성불자 108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는 등 불교계와도 인연을 맺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시설

금호 협력업체 줄도산 두고만 볼 건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5개월째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원키로 했던 정부의 정책자금마저 감감 무소식이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대금결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상태여서 당분간 채권단의 자금지원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협력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무급휴직 또는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등 한계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마저도 지난 9일부터 지원키로 한 정책자금 집행을 미루고 있다. 중소기업과 지식경제부 간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채

권단과 노조의 극한대립,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협력업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150여개사를 포함해 250개에 이르는 협력업체가 쓰러진다면 금호타이어 회생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반드시 회생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정상화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채권단은 노조의 동의서와 관계없이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서야 한다. 노조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는 회사가 회생 불능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이 길만이 모두가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경제와 국가발전을 원한다면 당초 약속했던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

5·18묘지 내 ‘매화동산’이 잡초밭이라니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로 조성된 국립 5·18 민주묘지 내 ‘매화동산’이 잡초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일부 매화나무는 잘리고 부러진 채 방치돼 있고 나무에 매달았던 이름표와 카드 등이 쓰레기처럼 나뭇잎과 함께 흩날리고 있다. 잡초밭 사이로 가로등과 전망대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어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매화동산은 지난해 2월 5·18 민주묘지를 추모하고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민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학생·주부·회사원·공무원 등 518명이 매화나무를 심으면서 조성됐다. 참가자들은 묘목을 심은 뒤 매화나무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나 희망 카드 등을 매달았다.

그러나 조성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화동산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다. 잡초는 무성하고 이름표나 카드 등은 쓰레기처럼 널려 있다. 이름표

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매화나무가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조차 어렵다. 공모에 선정된 참가자가 매화동산을 찾아 이 광경을 본다면 그 심경은 어떨까. 5·18에 대한 이미지 훼손은 불보듯한 일이다.

그럼에도 5·18 민주묘지관리소 측은 한 일이라곤 작년 9월에 퇴비를 한 차례 주고 잡초를 제거한 게 고작이다. 금년에도 식목일 전후로 정비하겠다는 말 뿐이다. 5·18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 관리가 이 정도인데 5·18의 전국화나, 세계화니 하는 게 공허하게 들린다.

올해는 5·18 30주년을 맞는다. 해당 기관과 단체가 다양한 기념 사업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민의 뜻을 모은 매화동산부터 제대로 가꾸지 못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여수엑스포 입장권 문화접대비 처리

일반접대비 한도 10%내 손비 인정 ... 기업 대량구매 길 열려

정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입장권을 문화접대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장려금(ETIC) 신청자의 재산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의 상품권 판매 사업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문화접대비는 공연, 체육경기 관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수세계박람회는 애매한 면이 있지만 행사 성공을 위해 시행 규정에 명기하게 됐다”면서 “기업들이 접대를 위해 대량의 입장권 구입이 가능해져 여수세계박람회 참관인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의 일반접대비 한도는 보통 연간 1천

200만원 내에서 일정 부분을 손비로 인정받지만 문화접대비는 총 접대비의 3% 이상을 쓸 경우 일반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를 인정해준다.

즉 기업들 입장에서는 접대비 한도 인정을 더 받는 문화접대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수세계박람회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도 개정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재산 관점 기준과 관련해 신청자의 재산 중 유가증권의 범위에 출자 지분도 포함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 1천7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구에 매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재정부측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이 아닌 출자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주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저소득 가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는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농업의 상품권 판매사업을 과세 전환하는 등 과세 형평을 고려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부 업무대행단체의 사업 범위도 재조정했다.

정부는 농업 중앙회가 상품권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 각 단위 농업에 위탁하고 있어 판매 수수료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정부 관계자는 “농협 중앙회가 상품권을 단위 농협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정부업무대행이라는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해 과세를 하기로 했으며 농협도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법원, 첫 기각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2일 경모씨 등 6천21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앞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대형 건설사의 탐욕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

/연합뉴스

천주교 주교단 “4대강 사업 환경 손상 우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이하 주교회의)는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이 나라 전역의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교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위법하며 수많은 굴착기를 동원해 한꺼번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지난 8일 4대강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춘계 정기총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주교들의 찬반 의견을 들었다. 주교회의는 “육성으로 인한 경솔한 개발의 폐해가 우리 자신과 후손에

게 지워질 때 이 시대의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라며 “무분별한 개발로 단기간에 눈앞의 이익을 얻으려다가 창조주께서 몇 만 년을 두고 가꾸어 온 소중한 작품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정부 당국자와 국민 모두가 우리 자신과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 있고 양심적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주교회의 강우일 의장은 “정부 실무진의 설명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분들의 설명을 들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측의 설명이 너무나 미흡하고 도저히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모든 주교의 공통된 우려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노사 협상 또 결렬

금호타이어 노사가 12일 일간협 본교섭을 재개했으나 또 다시 결렬됐다. 노조의 쟁의행위 가결 이후 노사는 두번째로 만나 의견 접근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날 오전 제12차 본교섭과 오후 노사 대표 3인씩 참석하는 ‘대표자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노사는 “원론적인 주장만 하면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다. 선을 갖지 말고 길을 모색해 보자”고 공감, 그 어느 때보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노사는 대표자회의 이후 각각 자체 회의를 개최해 절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종두

바쁘게 언제 국회열고 있었어?!

한 前총리측 “5만달러·골프채 받지 않았다”

곽사장, 법정서 검찰 진술 번복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국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골프채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경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한 전 총리는 여성부장관 재직시 (곽 전 사장과) 점심식사를 한 뒤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하라고 권하기에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성의로 받겠다’며 모자 하나만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며 곽 전 사장의 기각을 깨달았다.

이에 곽 전 사장은 “그날 한 전 총리를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골프숍에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난다. 같이 가서 사준 것은 기억하는데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가지고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고 증언했다.

곽 전 사장은 또 이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했던 5만 달러 전달 과정에 대한 진술을 변경했다.

변호인이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돈을 한 전 총리 손에 주었는지 아니면 다른 가구 위에 놓았는지를 묻는 말에 “출입문 근처에 둘다 서 있는 상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 어디다 올려 놓고 그럴만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며 “제 기억으로는 한 전 총리에게서 바로 건네 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돈의 전달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어떤 것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어제 진술한 것(의자에 놓았다고 말한 것)이 맞다”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그제(의자에 놓은 것) 맞는 것 같다”고 재차 확인했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제작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